

## 대담

### 스웨덴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은 전형적인 고(高)부담-고(高)복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국민부담률이 GDP의 47.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금 부담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은 수준이어서 근로자의 해고 또는 계약직 채용이 자유롭다.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고(高)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로 스웨덴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Future Studies)의 요아킴 팔메(Joakim Palme)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의 복지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소개한다.

**김용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의 공공재정은 안전한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한다.

**팔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북유럽과 남유럽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사회 및 경제적 정책은 이와는 별도였다. 사회적 및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은 재생산(re-production), 즉 안정적인 인구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정된 인구성장이 없다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노동시장은 축소된다. 이러한 경우 해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인구구조의 불균형 정도가 심해질수록 안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유럽 국가의 출생률을 보면, 각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남유럽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입은 단기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민노동력의 질적인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민으로 기존의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남북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정책 모델을 비교하면 유용할 것이다. 초기 모델은 여성의 근로와 양육을 장려하는 형식으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여 육아비용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다 육아에 책임을 지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유럽의 남북간 차이는 출생률, 노동인구, 교육에서도 드러난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인력의 실제능력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북유럽의 경우 그렇게 크지 않다. 스웨덴의 기업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는 고령 노동인구의 문제와 연결된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연금이나 퇴직수령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 기업이 재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특히 나이든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스웨덴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개혁으로 역할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말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활동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한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되었다.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차이점은 있을 것이다. 북유럽 국가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좋은 사례로는 1990년 덴마크 정부의 개혁이다.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협상이었다. 노동환경 유연성의 대가로 정부가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재

협상이 계속 있었다. 아마 3회의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정책적 변화를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고, 좀 더 발전된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뢰 및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김용하** 스웨덴과 같이 복지지출이 큰 국가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팔메** 정부재정 부문에서 스웨덴은 다소 역설적이게도 이렇다 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정부재정은 건실히 운영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그렇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크데도 말이다. 198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면, 균형적인 정부재정과 복지국가의 지출 규모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복지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재정지출이 더 균형적이라는 말이다. 복지국가의 각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부담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용하** 스웨덴은 지난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부유세 폐지로 줄어든 재정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팔메** 우선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부유세가 아닌 사회보장 부담금에 기초한다. 과거 고용주가 사회보장 재원의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 스웨덴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방정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정부의 복지제도는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조세저변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의 지원 조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회민주당과 재계 사이에 많은 협상이 있었다. 재계는 부유세와 상속세 폐지를 원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자손에게 물려주길 바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정부도 기업주들의 가족이 대를 이어 사업을 승계하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다음으로는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상속세 폐지 이후, 두 번째 중도우파 정부는 바로 부유세를 폐지했다. 이 결정에 대한 이유도 상속세 폐지와 같은 즐거이다. 세계화와 규제 완화로 인해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워져 세금부과의 기준이 희미해진 터였다. 특히나 스웨덴 국내시장에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유세를 폐지하여 해외로 빠지던 자금을 스웨덴으로 되돌리자는 취지였다.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같은 결정을 내린 국가들이 많다. 하나 덧붙이자면, 2007년 중도우파 정부는 이런 변화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갔다. 재산세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누진세였으나, 이제는 일률세 형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중도우파 정부의 영향력과 스웨덴 사회의 변화 방향을 대변하는 것이다.

**김용하** 세제가 그렇게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근로자는 뭘 얻게 되는가? 특히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팔메** 근로자 3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명은 100,000 크로나, 다른 한 명은 300,000 크로나, 또 다른 한 명은 600,000 크로나를 번다고 하자. 이들은 소득의 30% 정도를 지방세로 낸다. 일률세율이다.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보험 등이 제공된다면, 여기서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 세 사람 모두 의료서비스를 제각각 이용할 것이다.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소득비례 모형을 취하고 있다. 애플 경우 소득의 8%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다. 소득차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은 낮은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무직일 경우가 많고 자주 아프다. 소득재분배에는 사회적 위험이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계층이 소득재분배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김용하** 호주나 캐나다의 복지모델은 어떻게 보는가?

**팔메**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복지모델은 시작할 때는 비슷한 방향으로 나

아갔을지라도 지금은 크게 다르다. 뉴질랜드는 1930년대에 벌써 보편적 연금제도를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도 보편적 연금제도가 확산되게 되었다. 정액급여와 가족복지 지원금을 택했다. 가구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정액급여였다. 나중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더 세분화된 제도로 변화했다. 실업보험이나 질병보험에서는 선별주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지원을 하게 된다. 아프거나 소득이 없어야만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시스템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보험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지출을 덜해도 된다는 이점을 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험은 아니다. 1950년대에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자신의 노작 '부유한 사회'에서 갈파했듯이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보장을 원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직업연금이나 민간 형태의 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다. 아마 바그너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유할수록 더 많이 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특히나 개인적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의, 조세저변, 사회보장, 사회보험 부담률 등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부분에서 각 국가는 각자의 모델을 개발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김용하** 지금의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추천한다면? 현금 중심인가 서비스 중심인가?

**팔메** 스웨덴의 일부 정치인들도 이러한 질문을 했었다. 현금 중심이어야 할지 서비스 중심이어야 할지. 일반적으로 나는 이러한 형태상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르게 쓸 때 발생한다. 방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금이든 서비스든 국민이 낸 것과 받는 것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다면, 후자가 사회보험인가 사회서비스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스웨덴과 기타 유럽국가의 경험을 보면, 민영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반해 보장혜택이 적다. 의료지출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스웨덴이나 기타 북유럽 국가, 영국의 보편적인 제도는 효율적인 반면, 다른 유럽 국가는 비용부담이 높다. 미국의 경우는 더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방법론 문제는 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고안 목적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제공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내 견해이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며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출산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아주 높게

평가한다. 한국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일단 교육에 많이 지출한다. 이는 특히나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세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아쉬운 점은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국가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그렇게 못하는 젊은 부부들은 유럽에도 많다.

**김용하** 지난 20여년에 걸쳐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사회서비스 부분에 시장 기제를 도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지공급주체가 다원화된다는 것은 서비스 공급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포함하게 되는데,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팔메**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독점화되어 있었다.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복지를 지방정부가 도맡고 있었다. 간혹 교회나 종교단체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였다. 1980년대에 사회민주당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했다. 그러나 1992년 중도우파 정부는 대

단히 중요한 제정법을 내놓게 된다. 사회 서비스를 시장경쟁에 전면 개방하고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전달할 영리기업의 설립을 표방한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서비스냐에 따라 민영화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학교 바우처시스템도 한 예이다. 스웨덴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다. 사립학교는 재단이 종교단체이거나 기업일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혹은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델은 다양하다. 때로는 지방자치정부가 옵션을 통해 가장 낮은 비용을 부르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은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가 공공제공자나 민간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또 대단히 좋은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서비스 부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민영화 이후로 학교 간 격차는 더 커졌다. 노인요양서비스도 지역별 격차가 벌어진 경우이다. 민영화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어떤 곳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민영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용하** 스웨덴의 현 정부는 정책 목표를 완전히 용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팔메** 1950년대 당시 스웨덴은 수출 위주의 대기업이 이끄는 작은 경제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자유무역을 받아들여 경제 규모를 키우는 한편 국제시장의 부침을 견뎌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이 자본주의의 파괴력에 순응해왔다는 것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란 일부기업의 실패와 퇴출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파괴력은 그런 의미이다. 단기적으로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파괴력은 사실 창조적 파괴력이기 때문이다. 실패한 기업이 퇴출한 자리에는 새로운,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생겨난다. 실패한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될 수 있다. 저급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대략 이런 것이 1950년대에 스웨덴이 펼치기 시작한 전략이다. 자꾸만 새로워지는, 부단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국민을 일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것이다. 시장주의 전략은 점점 더 크게 자리잡아갔다. 그러다가 스웨덴은 EU에 가입했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 동안에는 정부보조 주택부문을 포기했다. 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개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의 방식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소득보장과 직업교육이 바로 개인을 보호하는 기제이다. 직업교육은 낡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다. 한동안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기계가 산업부문에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모두가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의 현재 고용률은 1990년대 이전보다도 낮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1991년과 1993년 사이 일어났던 대규모 실업과 연관이 있다. 약 18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자그마치 5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전에는 일정한 숫자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곤 했다. 경제는 호황과 침체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아직도 1990년대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도 영향을 끼쳤다. 계속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난민도 문제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

**김용하**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연금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팔메** 스웨덴연금개혁 최저보증제도 연금개혁은 사회계약을 변화시키고 있다. James Kishkent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형태의 연금을 ‘경성 사회계약 관계’로 정의내린 바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는 복지제도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 부담률이나 급여수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는 ‘강성 사회적 계약관계’로서 불변한다. 연금제도의 목표는 두 가

지이다. 최저보장과 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최저보장이다. 내가 가진 걱정은 보편적인 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혁을 통해 바뀐 것은 부담률이 올랐다는 점이다. 시스템의 인덱스 방식도 변화했다. 개혁에 따른 정부지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지출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세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다. 전체 정부 지출의 비율에서 이러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작다. 최저보장제도는 제법 많이 변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스웨덴 정부의 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었다. 비판은 주로 복지국가의 비용통제력이나 근로유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부담률을 조정함으로써 비용통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즉, 최저보장과 소득보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연금제도의 부담률은 소득의 18.5%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아닌가 물었는데, 모든 소득계층에 소득의 18.5%를 부과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속이 더 강화된 게 아닐까. 다만 18.5% 중 개인계좌로 들어가

는 2.5%는 어쩌면 신자유주의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2.5% 만큼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인이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한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김용하** 많은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결정구조를,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꼽는다. Palme 소장은 특정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결정에 핵심적 요소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특정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중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다른 국가가 벤치마킹하여 따라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시사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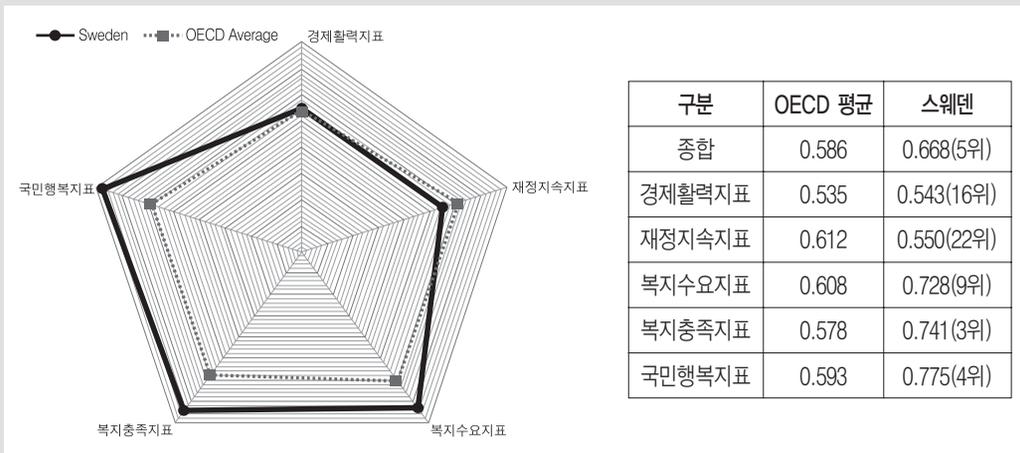
**팔메** 사회적 합의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확대를 추진할 때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어찌 정치적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을 살펴보면 2003년에 일어난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보수당인 신민주당 지도부의 수사법 변화이다. 사회정책이란 말도 자주 사용했다. 세금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세제를 잘 평가해 조금씩 조정해나가겠

다고 했다. 조금씩 바뀌어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국민이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혜택의 질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제는 이견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미래에는 인구고령화 때문에 보건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계속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정치계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어떤 결정이든 반대에 부딪히는 법이다. 이럴 때에는 결국 무언의 사회계약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시스템이 지속가능한가는 아직 답이 나지 않은 문제이다. 미래의 과세기준을 정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유럽 국민들은 교육부분에 엄청난 지출을 한다. 지식경제라고들 하지 않는가. 스웨덴 모델에 있어서 기적은 없다. 우리 또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부분일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연금개혁 측면에서도 그렇다. 서로 교류하면서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 □ 스웨덴의 복지수준

- 30개 OECD 회원국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복지지수로 KIHASA-Chosun Welfare Index 2011을 개발함.
  - 5개 부문에 걸쳐 총 27개 개별지표를 선정
    - 경제활력지표: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5개)
    - 재정지속지표: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4개)
    - 복지수요지표: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비율, 산업재해발생률(6개)
    - 복지충족지표: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및 보육지원율, 장애급여 보장률,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7개)
    - 국민행복지표: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여가시간(5개)
- 5개 지표를 종합한 스웨덴의 최종순위는 5위로, 종합 평균은 0.668점임.
  - 국민행복지표, 복지충족지표, 복지수요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경제활력지표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
  - 재정지속지표(0.550점, 22위), 경제활력지표(0.543점, 16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함.

### □ 스웨덴의 지표간 종합결과



자료: 김용하 외(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요아킴 팔메(Joakim Palme)

스웨덴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Future Studies) 소장, 오페라 대학 정치학과 교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 설립된 스톡홀름 미래연구소는 인구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팔메 교수는 2002년부터 소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스벤 올로프 팔메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연금 권리: 1930~1985년 OECD 18개국 노령연금 발전(1990)」, 「노르딕 모델과 유럽의 사회보호의 근대화(1999/2000)」, 「Europeisering av Sverige(2010)」 등이 있다.